



# 광남일보



조건 제 8046 호 대표전화 062-370-7000

GwangNam.co.kr

2026년 3월 18일 수요일 (음력 1월 30일)

## 20조 어디에 쓸까?... 후보들 “기업·산업 유치 최우선”

(4년간 정부 지원금)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A조 합동토론회

김영록 “산업·인프라 투자”·강기정 “투자펀드 조성”  
민형배 “산업 체질 바꾸기”·주철현 “미래산업 중점”  
의대·주청사 놓고 ‘격돌’...공약 실현 가능성 공방 치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A조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기업 유치를 한 목소리를 냈다. 통합특별시에 주어지는 20조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과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산업을 키우고,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자의 구상을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의 주청사를 둘러싼 후보들의 생각도 수면 위로 떠오르며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관련기사 2·8·9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경선 A조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예비후보 등록 직무정지), 민형배·주철현 국회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현재 광역단체장과 유력 주자들이 한 조에 묶인 이번 토론회는 산업 전략과 20조 재정 활용, 에너지 자선지소 해법을 둘러싼 후보 간 구상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통 질문을 중심으로 후보 간 정책 방향이 뚜렷하게 갈렸다. 먼저 '1호 공약'을 놓고 각 후보의 철학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주철현 후보는 “전남광주 27개 시군구가 골고루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균형발전형 특별시를 제시했다. 김영록 후보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첨단 양산까지 이어지는 풀 사이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산업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강기정 후보는 “청년, 소상공인, 농어민, 예술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별 시민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시민 체감형 복지 정책을 강조했다. 민형배 후보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며 행정 구조 혁신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20조원 재정 인센티브 활용 방안에서도 후보별 접근 방식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김영록 후보는 “전략 등 핵심 산업에

10조원을 집중 투입하고 교통망과 민생 지원까지 균형 있게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후보는 “3조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대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후보는 “재정의 80%를 초·중·고와 반도체 인프라에 투자하고, 그 수익은 시민의 생애 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혀 투자-환원 구조를 제시했다. 주철현 후보는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산업에 집중 투자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 자선지소 전략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기정 후보는 “광주·전남은 전기를 생산하고도 쓰지 못하는 구조”라며 “송배전망과 차등요금제, RE100 산단인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후보는 “전남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남에서 쓰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을 통해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후보는 “현재 전력계통이 포화 상태라 산업 유치가 한계가 있다”며 “송배전망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후보는 “자선지소를 실현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주도권 질문을 통해서는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등을 점검했다. 관광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지방소멸위기 극복 방안, 예산, 산업 위기 돌파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구상들을 내놓고 실현 가능성을 살폈다.

전남권 현안 중 하나인 ‘전남 국립의대·부속병원 신설’에 대한 공방도 펼쳐졌다. ▶2면으로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17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A조 경선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들이 손을 맞잡으며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배 의원, 주철현 의원, 김영록 예비후보, 강기정 광주시장.

### 이대통령 “5·18 정신·부마항쟁 헌법 전문에 넣자”

개헌 공식화...“국민 동의 쉬운 의제부터 단계·점진적 추진”

지선과 병행, 내달 7일 마지노선...광주사회, 여야 결단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6·3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들의 숙원인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이 이번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9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 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나”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당부했다.

이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

엄요구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법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하며 개헌 특위 구성과 법안 상정을 독려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구체적인 개정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부 주도보다는 국회 합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점진적 개헌론’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지시한 것은 사실상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는 국회를 향한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병행이 현실화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헌법개정 지방선거와 동시에 투표를 추진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이는 헌법개정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가 20일 이상 이뤄져야 하고, 국회가 60일 이내 의결한 뒤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규정을 고려한 물리적 시간을 역산한 경우다.

한편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는 여야 정치권이 더 머뭇거리기 시간이 없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중동전쟁 장기화...에너지 비상  
정부, 차량 운행 제한 검토 착수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차량 운행 제한 등 수요 억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 단위 부제가 시행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에너지 위기를 위한 고강도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화’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며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통합시장 후보에 듣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면

주최 | 영암군 | 주관 | 광안문화회·과와재산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2026 경암 왕인문화축제

4.4.토 - 4.12.일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 유적지, 상대포 일원

위대한 해